

한·중·일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ilitation of Electronic Trade by Establish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Korea, China and Japan

이충배(Chungbae Lee)* · 이정민(JeongMin Lee)**

요 약 (ABSTRACT)

An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is sweeping the world driven by digitalization and tremendous popularity of the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nd trade is the mainstream of this trend, and realization of a cyberspace without physical, spatial, and time restraints has led radical structural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North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core economic region in terms of economic growth, intra-regional trade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to electronic trade system and networks would play a vital role in speeding up trade of commodities, service and information etc. Therefore the study aims to examine a scheme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by establish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s. The study begins with reviewing current situation 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such as the number of PC, utilization ratio of internet, information network, volume of electronic commerce. It is analyzed that what kinds of obstacles to facilitating electronic trade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physical infrastructure, institutions, regulations, technologies regarding information exchange among countries. Finally this study presents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remove the problems currently existed in vitalizing electronic trade.

Key Word : 정보인프라, 전자무역, 동북아시아, 제도, 법률, 물류, 정보네트워크

목 차	
1. 서론	4. 한·중·일 전자무역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 한·중·일의 무역관계	1) 전자무역의 문제점
1) 한·중·일의 경제현황	2)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2) 한·중·일의 역내교역 현황	3) 전자무역 활성화의 파급효과
3. 한·중·일의 전자무역거래 및 인프라 현황	5. 결론
1) 한·중·일 3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참고문헌 및 자료
2) 한·중·일 3국의 전자무역 인프라 현황	
3) 한·중·일 3국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부교수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세계경제가 선진국 주도로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전되고 있는 동시에 EU, NAFTA 등과 같은 지역주의(Regionalization)의 색채가 강한 경제블럭들이 공존하는 다원적인 경향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 WTO, OECD, APEC 등과 같은 국제협력체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관련 제도 및 규범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체들이 전자상거래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는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동북아시아의 한국을 비롯한 중국 및 일본에서도 전자상거래 확대에 대비하여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제무역에서의 이용도가 제고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한·중·일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3개국은 상호 중요한 무역상대국이기 때문에 역내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무역거래비용의 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인접한 국가간 상호 협력이 세계무역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역외지역의 선진국들로부터 각종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협력은 국제기구 또는 역외 국가들에게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동북아경제협력체 설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고는 한·중·일 3국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역내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한·중·일의 무역관계

1) 한·중·일의 경제현황

수출을 중심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해 온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전략은 전후 세계경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동북아의 경제발전이 대외지향적 공업화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세계공산품시장을 석권해온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7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등장하여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활력소가 되었으며, 70년대 말부터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한 외향형 경제발전전략을¹⁾

1) 외향형경제발전전략 1988년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趙紫陽이 제기한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전략으로서 외자유입과 기술도입 등을 통해 연해지역에서 외향형 산업발전 및 수출주도형의 경제모델을 건설하고 수출확대, 기업개조 및 경제구조 조정 등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가속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안석교, 허홍호,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인식과 동북아 경제통합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1-12, 2001. 12. 20, p.15.)

통해 9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표 1>은 한·중·일 3국의 총수출입 및 세계경제에서 동북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계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을 기준으로 각각 14.7%, 11.5%로서 1998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 3대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표 1> 한·중·일 3국의 수출입과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억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국	수출	175	303	650	1,251	1,297	1,362	1,323	1,437	1,723
	수입	223	311	698	1,351	1,503	1,446	933	1,198	1,605
중국	수출	181	274	621	1,448	1,512	1,829	1,836	1,952	2,493
	수입	199	423	533	1,291	1,389	1,422	1,403	1,658	2,061
일본	수출	1,304	1,772	2,876	4,431	4,109	4,210	3,879	4,194	4,792
	수입	1,413	1,305	2,354	3,359	3,492	3,388	2,805	3,113	3,795
전세계	총수출(A)	19,459	18,878	34,386	51,202	53,363	55,229	54,342	56,098	62,556
	3국 수출 합계(B)	1,660	2,349	4,147	7,130	6,918	7,401	7,038	7,583	9,008
	수출비중(A/B)(%)	8.6	12.5	12	14	13	13	13	14	14.7
전세계	총수입(C)	20,156	19,655	35,322	51,900	54,410	56,254	55,421	57,627	65,065
	3국 수입 합계(D)	1,835	2,039	3,585	6,001	6,384	6,276	5,141	5,969	7,461
	수입비중(C/D)(%)	9.1	10.3	10.2	11.6	11.8	11.1	9.0	10.4	11.5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서비스(KOTIS)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구조 비교분석과 향후 과제」, 2001. 6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함.

2) 한·중·일의 역내교역 현황

'8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 동서냉전구조의 와해, GATT와 WTO로 이어지는 범세계적인 개방경제체제의 확립 등 동북아를 둘러싼 주변여건의 변화는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²⁾

<표 2>는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의 1998년의 무역관계를 개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³⁾ 각국의 총수출입에서 3국간 지역내 무역은 약 9~3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역내 수출의 비중이 약 19~20% 그리고 지역내 수입의 비중이 약 25~31%로 각각 유사하며, 지역내 수입비중이 지역내 수출비중보다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일본의 지역내 수출비중은 약 9%, 지역내 수입비중은 약 18%로 한국, 중국과 비교할 때 양자 모두 매우 작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의 역내 시장

2) 신용대 외,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향-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산업연구원, 2000. 3. p. 21.

3) 양국간 무역통계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집계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출은 수출가격(FOB)으로 그리고 수입은 상대국의 수출가격에 보험료와 운송료가 포함된 가격(CIF)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수입국의 집계액이 수출국의 집계액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간 무역수지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역내 교역의존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이동비용이 적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낮추고 교역을 활성화하는 경우 3국간 교역이 현재보다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 2> 동북아시아 3국의 무역관계(1998년)

(단위: 백만 달러, %)

수입국 \ 수출국	한국	중국	일본	세계전체
한국	-	15,012(10.70)	12,142(4.32)	132,256(2.41)
중국	4,484(6.95)	-	37,079(13.18)	183,774(3.35)
일본	6,840(18.05)	28,307(20.16)	-	387,955(7.08)
세계전체	93,282(1.66)	140,385(2.50)	281,243(5.01)	5,478.2*

주: * 십억 달러

- 1) 각 셀의 오른쪽 위부분의 숫자는 첫째 행의 수입국의 첫째 열의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을 나타낸다.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열의 합(해당국가의 총수입)에 대한 각 수출국의 비중을 나타냄.
- 2) 각 셀의 왼쪽 아래부분의 숫자는 첫째 열의 수출국의 첫째 행의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출금액을 나타낸다.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행의 합(해당국가의 총수출)에 대한 각 수입국의 비중을 나타냄.
- 3) 마지막 행의 숫자는 각 해당열의 국가의 총수입 및 세계 총수입을 나타내며, 괄호안의 숫자는 세계 총수입에서 해당국가 총수입의 비중을 나타냄.
- 4) 마지막 열의 숫자는 각 해당행의 국가의 총수출과 세계 총수출을 나타내며, 괄호안의 숫자는 세계 총수출에서 해당국가 총수출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KOTIS 데이터에서 추출)의 자료 계산.

출처 : 남상열, 「동북아시아 3국간 무역의 보완관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연구」, 2000년 봄호에서 재인용.

한·중·일 3국은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규모, 교역규모 등과 같은 경제력은 물론 경제발전 단계, 경제운용체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국은 산업·무역구조의 보완성 및 경합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하는 가운데 상호 보완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협력이 단순한 교역형태에서 벗어나 자본과 기술이 체화된 산업내 분업으로 발전하면서 교역 상품이 최종재 중심에서 중간재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시 역내 교역을 구조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최근 일본경제의 불황, 1997년 말 이후 금융·외환위기로 한국의 성장세가 주춤하였으나 1990년 이후 연평균 19%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역내교역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지난 30년간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중·일 3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의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중·일 3국은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자본 및 기술도입선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이 등을 감안할 때 3국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특히 일본의 기술과 자본력, 중국의 자원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 동안 성장과정에서 축적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3국이 공유하는 경우 이들 3국간 성장잠재력은 극대화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들 3국의 위상은 NAFTA와 EU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 한·중·일의 전자무역거래 및 인프라 현황

1) 한·중·일 3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세계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시대로 진입하는 대변혁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세계적 변혁에 한·중·일 동북아 3국도 동승하여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Forrester사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시장 규모는 6,5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미국의 규모는 4,870억 달러(74.4%)에 달하며 아태지역은 437억달러로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9년 한국의 전자상거래액은 2,700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4,900만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1999년 중국의 전자상거래액도 4,000만 달러에 달해 1998년의 800만 달러에 비해 5배가 성장하였으며 오는 2003년에는 38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본 통산성 산하 단체인 ECOM(전자상거래실증협의회)과 앤더슨 컨설팅이 공동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1999년도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4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향후에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4년 뒤인 2003년에는 6,93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디지털화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을 100으로 할 경우 천명당 컴퓨터 수는 한국이 33.6%, 일본이 60.4%인데 반해 중국은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진전도면에서는 한·중·일 3국의 평균이 67.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동북아 3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한국	중국	일본
전자상거래규모(US\$10억)(2000년)		5.6	0.85	31.9
총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2004)		16.4	-	8.4
인터넷 이용자수(천명)(2000년)		10,000(21.3%)	8,900(0.71%)	19,500(15.5%)
디지털수준 미국=100	천명당 컴퓨터 수	33.6	1.8	60.4
	천명당 호스트 수	4.4	0.04	12.2
	인터넷 인구비중	43.8	2.0	43.9
	전자상거래 진전도	75.8	68.6	58.8
전자상거래 확산잠재력 미국=100	물류 인프라	71.6	66.5	95.0
	신용카드 보급률	38.0	-	39.7
	이동전화 보급률	158.5	10.4	121.5

자료: Forrester Research 2001; NUA Internet Survey; IDC, Market Forecast for Internet Commerce;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

전자상거래 확산 잠재력 면에서 살펴볼 때 물류인프라는 3국의 평균지수가 77.7%에 달하지만 신용

카드 보급률에서는 한·중 양국의 수준이 4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중·일 3국의 전자무역 인프라 현황

(1) 한국

① 법·제도적 인프라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본격화를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착수하여 1999년 2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촉진을 뒷받침하는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입법으로서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이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반영하면서 계속 제정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기본법과 함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서명법도 함께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의 본격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전자상거래기본법이나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거래 인증기관, 전자거래의 안전성,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의 지원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일반사항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상거래(사이버물)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인터넷 사이버 쇼핑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 운영자의 의무와 권리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무역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무역의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동법 제6조에⁴⁾ 규정되어 있지만 총괄적인 규율이나 법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는 무역자동화사업자,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 전자무역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는 전자무역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지만, 2000년 10월 16일에 전자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콘텐츠의 전자이송을 통한 국제적 거래를 무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2001년 2월에 체계적인 전자무역의 진흥과 국내외 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역거래의 효율성 제고 및 대외무역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3월 30일 발효하였다. 또한 2001년 3월에 산업자원부에서 무역진흥제도 종합안내서를⁵⁾ 발표하는 등 전자무역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점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② 정보통신 인프라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와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정보이용 속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고속의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해 수요자의 정보접근이 원활하지 못

4)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역전시회의 개최,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계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동 안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수출입진흥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진흥제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축이 되어 작성하여 2001년 3월에 발표하였다.

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정보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지난 19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에 완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지식기반사회의 핵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05년까지 완성기로 하고 추진 중이다.

조기구축 결정에 따라 변경된 주요 내용은 첫째, 당초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기간(1998~2002)을 2000년까지로 단축하여 초고속정보통신 기간망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44개 주요 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2000년에 완료하였다.

둘째, 당초의 3단계 사업기간(2003~2010)을 2001~2005년으로 단축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다. 초고속기간망은 ATM 교환망 고도화와 함께 IP(Internet Protocol) 기간망 구축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속국가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간전송망 확대와 함께 ATM 교환망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가입자망 고도화는 광케이블, xDSL망, CATV망, ISDN, 무선망, 위성통신망 등 국가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주요 변경 내용

	당초계획	변경내용
1 단계: 기반구축단계	· 1995~97년 -80개 지역 기간전송망구축 등	-
2 단계: 완성단계	· 1998~2002년 -2002년까지 144개 지역 기간 전송망 구축 -2002년부터 ATM서비스 제공	· 1998~2000년 -2000년까지 144개 지역 기간 전송망 구축 -2000년부터 ATM서비스 개시
3 단계: 고도화단계	· 2003~2010년 -기간전송망 및 ATM교환망 확충 및 고도화	· 2001~2005년 -좌동 -민간사업자를 통해 대용량 IP 기간망 구축 -IMT2000 등 유·무선 복합 초고속 가입자망 실현

자료: 정보통신부(2000b).

(2) 중국

① 법·제도적 인프라

중국의 인터넷 사업은 金字工程(Golden Project)으로 대표되는 세관, 금융, 무역, 교육, IT, 의료, 기업, 농업 등 10개 부문에 걸친 국가정보 인프라 건설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1993년 3월부터 정부 주도로 성장하게 된다.⁶⁾

중국 정부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자리를 잡아가고 일반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전자상거래의 관련규범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조만간 일반적 전자상거래 기술표준을 다섯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제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김동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 포스코경영연구소, 2001. 6. 25. p. 1.

첫째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셋째 전자상거래를 제정된 규범 안으로 끌어들이며, 넷째 국가 법률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다섯째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상거래 발전의 거시적 계획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련 부서간의 협력강화 및 전자상거래 우대정책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응용범위를 넓히는데 있다. 또한 정부는 각 응용서비스별 전자상거래 시범구역을 정하여 각 시범서비스 운용에 따른 법률, 제도적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규정한 규범 내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 안전기술 프로그램 등을 각 서비스제공자는 채택해야 하고,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② 정보통신 인프라

중국 통신 인프라 현황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7개의 주요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고, 통신네트워크 환경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공용 통신의 주요 구성부분인 사용자 접속 네트워크망도 점차 중국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중국통신망은 크게 교환망, 전송망, 접속망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십년간의 구축작업을 통해 중국의 통신 네트워크망은 이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선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PDH에서 SDH로 발전하고 있다.

<표 5> 1996-2000년 중 중국통신 주요 Project

분야별	주요 Project
광 케이블 구축작업	① 省간, 省内 광케이블간선 10만km 신설 ② 전국적으로 '8縱 8橫'의 광케이블 간선망을 형성 모든 성 소재지와 대도시를 연결 ③ 새 광케이블과 개조된 광케이블 간선은 SDH 전송시스템을 채택하고, 省간 마이크로웨이브 간선은 디지털로 개선
이동통신망 구축작업	① 이동통신망의 건설 중점 추진 및 국제적 연결과 로밍 실현 ② 2000년 현재 디지털 이동통신의 비율을 70% 이상 확대
데이터통신시설 확충작업	① PSTN 망의 용량을 20만 회선으로 증설 ② 디지털 데이터망(DDN)은 30만 회선으로 증설
고도통신인프라 구축	① 인터넷망의 발전 가속화 ② 전국적인 공동선신호망, 디지털 동축망(DSN)과 전산망 관리시스템 건설 ③ 시장수요에 따라 N-ISDN과 BOISDN을 발전시키고, ATM의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국민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출처: KOTRA, 「중국 정보통신시장의 발전과 대중국 진출 전략」, 2000. 3. p. 21.

(3) 일본

① 법·제도적 인프라

일본 정부는 2001년 1월 22일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e-Japan 전략」을 결정·공포한 바, 여기에는 일본이 5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IT국가를 건설한다는 등의 야심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IT 관련 산업(하드웨어 부문)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 관련 지표에서 미국은 물론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에 비해서도 뒤진 것으로 나타나자, 일본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民·官 합동으로 거국적인 IT 추진체제를 발족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주도하에 범국가적으로 IT산업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994년 6월 총리실 직속으로 발족된 '고도정보화 추진본부' 를 2000년 7월에 폐지하고 그 대신 범정부 차원의 'IT 전략본부' 를 설치하였으며, 그 산하에 민간인 중심의 'IT 전략회의' 도 설치하여 가히 民·官 일체의 'IT 총동원체제' 를 구축했다. <표 6>은 일본의 IT시책 추진경과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일본의 IT시책 추진경과 내역

1994. 8. 2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를 내각에 설치
2000. 7. 7	정보통신기술(IT)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 IT 전략회의의 설치
2000. 11. 27	IT 기본전략 결정
2000. 11. 29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 기본법)성립
2001. 1. 6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 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
2001. 1. 22	e-Japan 전략 결정
2001. 3. 2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2001. 3. 29	e-Japan 중점계획 제출
2001. 6. 26	e-Japan 2002 프로그램 결정
2002. 4	e-Japan 2002 중점계획 재검토안 발표

출처: 한국전산원, 「2002 국가정보화백서」, 2002. 6. 23, p.494에서 재인용.

「e-Japan 전략」의 주요 추진 항목으로는 첫째,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와 경쟁촉진 정책이다.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와 경쟁정책은 IT 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기업·국가 등 각 경제주체간의 거리와 시간을 극복하고 대량의 정보유통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인프라(Network Infrastructure)' 를 일본 국민이 널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 규칙과 환경을 새로 정비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상거래는 빠른 속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경없는 시장으로의 확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시장의 게임과 규칙을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성화하며, 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전자정부의 실현 및 IT 관련 인재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는 업무의 온라인화, 정부부서는 네트워크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T 관련 인재의 양성은 지식기반형 경제시대로의 새로운 시대에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IT의 프론티어를 개발하는 기술자·연구원 및 콘텐츠 개발자를 양성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② 정보통신 인프라

현재 일본에서는 전화접속은 물론, ISDN, 케이블TV망, ADSL 등을 이용한 접속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NTT도코모의 I모드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초고속 접속(30~100Mbps)이 가능한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적어도 3,000만 세대가 고속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1,000만 세대는 초고속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은 광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DSL(디지털 가입자선)·케이블 TV와 같은 고속 인터넷망 보급의 열세를 DSL의 수십~수백배 용량의 광섬유망을 인터넷 접속기반으로 구축하여 세계 최초로 초고속·대용량 인터넷 사회로 진입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3)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정책 비교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각국간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자상거래, 인증, 사생활 침해, 지적 재산권 등에 있어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조세시스템은 준비 단계에 있는 반면 중국은 전자상거래에서는 준비단계에 있으며, 보안 및 지적재산권에서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전자인증, 조세, 소비자 보호, 사생활 침해 보호 등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서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별 전자상거래 정책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인증	조세시스템 준비	보안	소비자 보호	사생활 침해 보호	지적재산권
한국	●	●	○			●	●
중국	○			●			●
일본	●	●	○		●	●	●

주: ● : 법률, 지침서 및 지도 ○ : 행동계획 및 검토

자료: Ryoji Yamad, "A Survey concerning Overseas Progress in EC", ECOM Journal, No.4, p.97

3) 한·중·일 3국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1) 한국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는 1989년의 산자부 무역자동화기본계획에 의해 1990년 무역협회 내에 설립된 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에 기인한다. 이 추진단은 1991년 12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으로 발족하며, KTNET은 우리나라 무역자동화의 초석을 놓았다. 정부는 무역자동화사업의 기반으로서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지원하였다.

KTNET은 이 법에 근거하여 무역업무 관련 서류의 표준화를 이루었다. 모든 무역 유관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물리적인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무역자동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역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역업체에 보급하는 등 무역자동화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무역자동화시스템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같은 무역자동화지정사업자가 수출입절차 전반에 걸쳐 중앙에서 무역업체와 무역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무역관련 각종 전자문서와 무역정보를 24시간 Non-Stop으로 중계·전송된다.

우리나라의 무역부문 EDI 전자문서의 완성도는 현재 약 95%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상역부문에서는 수출입승인서,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증명서 등 35개 서류가 표준화되었으며, 외환금융분야에서도 수출신용장통지서,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 등 31개 서류가 표준화되었다. 또한 통관부문에서도 수출입신고의뢰서 등 29개 서류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해상운송부문에서도 선적지시서, 선하증권 발급통지서 등 40개 서류가 표준화되어 있다. 보험부문에서는 적하보험증권 발급통지서 등 4개 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무역관련 서류는 총 139개 서류가 표준화되어 전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국내 분야별 EDI로는 관세청은 수출관세자동화시스템인 CEDIX(Customs eXport)를 1994년에 시작하였고, 또한 수입관세자동화시스템 CEDIM(Customs EDI iMport)을 구축하였다. 외환·금융EDI는 무역자동화에 있어 무역업체와 은행간에 주고받는 신용장내도와 통지, 수출승인서 등 제반 무역서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금융결제원은 효율적인 금융망 구축을 위해 금융기관의 분산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부구조를 개발하고 은행에 다양한 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데이터 보안을 위해 개별은행에 EDI 전용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자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물류 EDI시스템은 상역, 통관 등과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은 물류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기관을 망라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로 구성돼 정부대 정부, 민간대 정부, 민간대 민간 등 다양한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 EDI는 아직 초보단계로 무역망과 연계해 EDI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화재보험과 적하보험 추가부분의 EDI 표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도 철도운송분야에서 철도청이 한국철도운영정보시스템(KORIS)을 개발하여 하주들과 철도화물운송업자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상운송분야에서는 한국해운항만청은 PORT-MIS를 설치하여 한국물류정보통신을 통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LNET은 1994년 상업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수출입운송업자들과 물류서비스이용자들을 위해 EDI, 데이터베이스(DB), 그리고 다른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중국

중국 정부는 국제무역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중요 부문을 차지하는 만큼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시장으로서 인터넷이나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3년 이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 관세국(Customs Bureau), 국가 외환관리국(China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Bureau), 국가 통계국(China Statistical Bureau) 등과 중국의 상업은행, 일부 기업들간의 컴퓨터 네트워크화를 추진해 왔고,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무역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시간을 줄이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중국 전자무역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국영기업인 중국국제상무중심(CIECC: China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enter)인데, CIECC는 중국기업이 국제무역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설립한 국영기업이다.

CIECC는 우리나라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CIECC의 네트워크는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의 주요 부처와 지역사무소, 6개의 산하 무역협회에 연결되어 있다. CIECC는 중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무역에서의 전자상거래 역할을 설계하고 중국내 전자거래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

는 책임을 지고 있다.

CIECC의 주요 업무는 중국 대외무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는데, 중국의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CIECC의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섬유 쿼터관리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 관세당국의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적으로 연결하고 둘째, 온라인을 통한 수출입허가 관리 및 검사를 위한 대외경제협력부와 세관간 협력관계(MoFTEC-Customs trail)를 조정하며 셋째,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을 보장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전자적으로 개방된 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세관간 대외무역통계량 통합(harmonizing: 60개 이상의 표준무역 형식이 전자적으로 가능함)과 중국정부의 대외무역정책 담당자와 기업경영인을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섯째,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 검사, 관리를 위한 전자적 원산지증명(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섯째, 전자검역(electronic inspection)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상품분류 코드(coding system)를 표준화하고 있다. 또한 CIECC는 지난해 결성된 범아시아 전자상거래 협의체 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에 한국의 KNET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CIECC가 지원하고 있는 차이나트레이드월드닷컴(China Trade World.com)은 중국과 세계 각국간의 무역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의 지원을 받고 있는 차이나프러덕트닷컴(Chinaproduct.com)은 중국의 수출업자 및 제조업자를 직접적으로 전세계 바이어와 연결해주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기업간전자상거래(B2B)포털사이트이다.⁷⁾

(3) 일본

일본의 경우는 산업별·업무별로 민간 주도로 EDI 업무가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중심적인 서비스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통관부문의 경우 관세청이 EDI화물통관시스템(NACCS: 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을 운영중이다. NACCS의 경우 항공부문에서 출발하여 해상부문으로 확대되었는데, 1997년 NACCS특별법이 통과되었고, 1997년 10월 NACCS운영기구(Nippon Air Cargo Clearance System Operations Organization)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7월 NACCS가 Air-NACCS 및 Sea-NACCS로 재편되었다. 이 서비스의 고객은 세관, 보세창고, 관세사, 항공사, 선사, 포워드, 은행 등이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출입통관신고, 보세구역내의 화물 재고·반출입관리, 관세수납, 각종 통계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통산성은 국제무역 및 대금 결제 EDI서비스 구현을 위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준 공공기관인 E-COM(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 일본전자상거래진흥협회)이 구현 업무를 담당하여 무역자동화시스템(T-EDI: The Trade & Settlement EDI Common Platform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통산성의 주도로 기업간전자상거래(B2B)관계에서는 '기업간전자상거래추진기구(Japan EC/CALS Organization: JECALS)'가 기업소비자간전자상거래(B2C)관계에서는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 ECOM)가, 또한 전자데이터교환관계에서는 '산업정보화추진센터(Center of the Informationization of Industry: CII)'가 각각 활동해 왔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의 보급과 확대에 따라 종래의 B2B, B2C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과제가 증가

7) 원신희, "중국의 주요 분야별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세계경제』, 2002.2, p.78.

하고 있고, 세계속의 전자상거래 핵심지역의 역할 수행이라는 정책의 목표하에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결집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2000년 4월 1일 위의 세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를 결성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는 종래 개별적으로 행해졌던 전자상거래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제품모델데이터의 교환에 관한 표준) 등의 표준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하튼 무역자동화시스템(T-EDI)의 목표는 무역업체, 은행, 보험사, 운송업체 등 모든 무역커뮤니티를 연결, 신용장 개설, 보험증권 발급, 선적지시 등의 업무를 EDI로 서비스하고, 선하증권(B/L)의 발급을 포함한 대금결제업무도 자동화하며, 교환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Internet Based Open System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4. 한·중·일 전자무역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전자무역의 문제점

최근 정보기술산업의 침체와 세계 경기의 후퇴 등이 전자무역의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전자무역은 국제무역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자무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지난 5월 영국의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상거래 준비수준(e-read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가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준비가 물적·제도적인 하드웨어부문에서는 상당히 앞서고 있으나 구조적·조직적 측면과 소프트웨어부문에서는 크게 열악하여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정보화와 전자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PC의 보급(1999), 전국적인 초고속통신망 구축완료(2000)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 확립(2000), 산업별 B2B 시범사업(2000), 중소기업 1만개 정보화 추진사업(2000), 디지털 전자산업단지 구축사업(2001), IT 인력양성, ASP 발전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인프라의 미비, 인적 인프라의 부족문제, 정보인프라 및 정보마인드의 부족문제 등을 갖고 있다.

첫째, 법·제도적인 인프라의 미비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효과, 전자거래 인증기관,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의 지원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일반 사항과 원칙 등을 규정해 놓은 실정이다. 그리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도 무역서류의 EDI화에 관련된 내용만을 국한하여 다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전자무역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

다. 그 외에도 무역거래기본조성예관법률은 인터넷 무역지원과 관련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인터넷무역을 총괄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중추적인 법률인 대외무역법에도 인터넷 무역이나 사이버 무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전자무역을 기반으로 한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⁸⁾

둘째, 인적 인프라의 부족문제이다. 실례로 산업자원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3월 기준으로 전자무역을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총 37만 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간 5%이상의 신규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2000년에는 1만 3000천명, 2005년에는 2만 7000천명의 인력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⁹⁾ 또한 IT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정규대학 교육과정도 부족한 편이며, 현행 전자무역관련 인적자원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미비와 특성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셋째, 정보인프라 부족문제이다. 하드웨어적인 정보인프라부문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부문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져 있으며 특히 R&C(Resource & Capabilities) 측면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거래에 상응하는 기업시스템의 변화 부족,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거래관행, 조직과 IT시스템간의 부조화, 기업간 협력문화의 부재 등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중국

중국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산업은 아직 진입 초기단계에 있고 법적·제도적 제약과 인프라의 부족 때문에 전체 온라인 활동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으로는 결제시스템과 물류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규제 등을 우선 지적할 수 있는데, 중국 결제시스템의 문제는 첫째, 광활한 국토를 실시간에 커버할 전산망 구축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둘째로는 고객 신용도를 일괄적으로 평가할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COD(Cash on Delivery, 貨到付款)와 직불카드(debit card)등이 이용되고 있는데,¹⁰⁾ 이는 개개인의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¹⁾ B2C 사이트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대금지불방식은 현금지급방식(COD: Cash on Delivery)방식으로 85%의 쇼핑몰이 COD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결제시스템의 발전은 온라인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WTO 가입 후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자본이 진입하여 온라인망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현행의 시스템이 크게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내 낙후된 물류인프라로 인해 대부분의 사이트는 탁송 가능지역을 10여 개 대도시로 제한하여 놓았는데 이러한 점이 중국 물류시스템의 문제점이다. 이는 COD 서비스를 하는 택배회사의 영업망

8) 안지홍,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1호, 2001.6

9) 산업자원부,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 및 사이버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0. 4.

10) UNCTAD, *E-Commerce and Development Report 2001*, New York, 2001, p.247

11) 즉 명칭만 신용카드일 뿐 그 기능은 우리의 직불카드와 동일하다.

이 제한적인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원거리의 경우 높은 택배비용이 발생되어 아예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유념한 조치이다. 앞으로 중국 물류시스템의 발전방향은 시간단축이 아닌 우송 가능지역의 확대에 추진될 전망이다.¹²⁾

정부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중복된 정부의 규제와 통제의 예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것보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인터넷 관련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인터넷 사업이 지장을 받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국경 없이 시공을 넘나드는 인터넷의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통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에 대한 외국인 투자장벽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외국자본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또는 전자상거래 기술에 관한 전문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은 정보기술의 인력이 부족하다.¹³⁾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자체 인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낮은 PC보급률, 높은 통신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 등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보안성 등의 문제와 현금을 선호하는 중국인의 전통적 상거래 관습도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외정책방향은 적절한 정보통제와 인터넷 산업에 대한 외자기업 규제로 일관해왔다.

1999년 말 현재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기업체 수는 1만 5천여 개로 중국 총기업체 수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컴퓨터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워드 프로세싱 및 문서처리(96%), e-mail(84%), 데이터처리(79%)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¹⁴⁾ 대부분의 기업이 기본적인 접촉정보와 e-mail 주소를 제공할 뿐 전사적 자원관리, 고객분석, 공급망관리 등을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일본

일본 정부는「e-Japan 전략」에서 우선 전자상거래 발전이 원칙적으로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민간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기본으로 하여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규제 등의 관여를 할 경우라도 명료하고 투명하도록 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불확실성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정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기업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일본에서 편의점, 종합상사, 자동차 등 분야의 대기업들은 기존의 유통·판매망과의 충돌을 우려 인터넷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복수기업간의 상호접속이 실현되고 있지 않아 업

12) UNCTAD, op., cit., p.248

13) 정보산업 인력 중 12.5%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6.25%가 하드웨어에 종사하고 있다(MII, 2000)

14) Dougan, Diana Lady and Fan, Xing, Scaling the Great Wall of E-Commerce: Strategic Issues and Recommended Actions, Cyber Century Forum, Washington D.C., 1999.

무 전체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거래(B2C)가 기업간 전자거래(B2B)보다 활성화되어 있어 세계 제2위의 무역대국으로서 위상에 비교하여 세계기업간 전자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한·중·일 3국은 역사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각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요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3국간 협력과 이해가 증진된다면 동북아 3국간의 전자무역을 다른 지역보다도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표 8> 한·중·일 3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촉진요인	장애요인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완료 ·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산업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의 부족 · 불투명한 거래관행 · 기업간 협력문화의 부재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발전단계: 무한한 성장 잠재력 · WTO 가입과 대외개방 확대 ·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 사업육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규제적 환경 -대외적인 인터넷산업에 대한 외자기업 규제 -중국의 체제적 특성상 정보통제 · 미비한 인프라와 높은 통신비용 · 중국의 전통적 상관습, 문화와 인터넷 비즈니스의 괴리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의 거국적인 IT 총력 추진 체제 확립 · IT(하드웨어)부문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 무선인터넷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을 고수하려는 아날로그적 사고방식 · 정부의 이용규제와 외자규제 같은 각종 규제 · 비싼 요금과 속도가 느린 인터넷

2)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1) 전자무역 활성화의 필요성

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경제발전과 함께 역내무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로가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총수출입에서 3국간 역내무역은 약 9~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중·일 3국간의 역내 시장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교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이동비용이 적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낮추고 교역을 활성화하는 경우 3국간 교역량이 현재보다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3국은 교역규모 등과 같은 경제력은 물론 경제발전 단계 및 운용체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국은 산업·무역구조의 보완성 및 대체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하는 가운데 상호 보완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한국은 일본에, 중국은 한국에, 일본은 중국에 무역 역조가 발생하여 한·중·일 삼국간에 순환적으로 맞물리는 구조적인 무역역조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역조현상을 시정하고 3국간에 무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논의되는 것이 전자상거래이다.

(2) 추진현황

한·중·일 3국은 개별 국가단위로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디지털화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경제체제에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체제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삼국간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정부간 협력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고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민간과 정부간 교류·협력의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채널로는 한국측에서는 한국전자거래(CALS/EC)협회가,¹⁵⁾ 일본측에서는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COM)가 각각 창구가 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한국의 산업자원부가, 일본에서는 통산성이 중심이 되어 양국 전자거래 관련협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업자원부는 양국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단체,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한·일 전자상거래 추진협의회'를 설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00년 9월 한일 정상간의 IT협력 이니셔티브에서는 전자상거래분야에 관한 협력과 아시아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이니셔티브 발휘를 위한 양국 산업계의 협력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3국간 서로 다른 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한·중·일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동북아 민관합동 고위표준대화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전자무역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새로운 수출 동력, 전자무역(e-Trade) 종합육성시책'의 하나로 추진 중에 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통합무역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통합무역관리시스템을 전자무역 기반조성에 활용해 e무역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 또 무역업체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의 통합관리 및 무역 EDI와 무역관리 프로세스간의 통합도 담고 있다.

지리적으로 보다 확장된 사업의 형태로는 범아시아전자무역네트워크(PAA: Pan Asian e-Commerce Alliance)나 APEC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논의를 들 수 있다.¹⁶⁾¹⁷⁾

15) 「조선일보」, 1998. 10. 9, 4면.

16)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2000년 9월 한국의 KTNET, 중국 CIECC, 홍콩 Tradelink, 대만 Trade-Van, 싱가포르 CrimsonLogic의 5개 사업자의 창립 회원사와 읍저버로 일본 TEDI가 역내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PAA가 구축되면, Portal Site를 통해 역내 모든 기업들이 한 곳에서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용록, "동북아지역의 전자무역공동체 추진에 관한 연구", 2002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2002 참조).

17) APEC에 의한 논의는 윤진나,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논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세계경제」, 2001.11, pp.49-50.

<표 9>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 협력방안

협력에 관한 세부내용		
중 국	전자상거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관련 법, 제도 및 통계 등의 공유 · 양국간 표준화, 소비자 보호 및 기술적 호환성 분야 협력 · 전자무역 실현 · 전자상거래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교류 ·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협력위원회’ 설치 · 한·중 경제무역협력 사이트 공동 구축 합의
	국제협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APEC, ASEM 등 다자협의체에서 한국과 협력
일 본	전자상거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한 무역업무 처리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합의 · 양국의 자격증 상호 인정 · IT 기술수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술교육 협력 등에 합의 · 기계 및 전자업종의 표준화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호운용을 위한 작업 추진 · 전자상거래 인증마크에 대한 상호 인증 검토 ·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상호 인증을 위한 정보교환 · 전자부품 검색엔진을 개발하여 양국간 전자상거래에 적용
	국제협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APEC 및 APT의 틀 내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 등에 관한 협력을 가일층 심화시켜 나갈 · WTO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활동과 ITU의 관련 활동에 있어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가

(3) 활성화 방안

3국간 교역에 전자상거래의 도입은 중간상인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직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B2C거래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한 전자상거래의 도입은 상품의 원자재 구입에서부터 생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의 비효율을 없애고 B2B의 간접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3국간 교역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간의 전자상거래 협력 역시 그 기본목표를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3국 전자상거래 협력의 중점은 B2B분야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업과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고,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와 민간의 이원적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는 민간의 주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제도적 인프라와 통신 및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¹⁸⁾

한·중·일 삼국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국간 사

18) 김기홍, “한일간의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2001. 3. p.5.

이러한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전자상거래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정보인프라를 구축 그리고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들 수 있다.

첫째, 아시아지역내 디지털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현재까지는 한·중·일 3국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에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 삼국간 디지털 네트워크 공조체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중간에는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합의하였으며, 한·일간에는 정부간 공조와 민간부문간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로서, 2000년 9월 한일 정상간의 IT협력 이니셔티브에서 전자상거래분야에 관한 협력과 아시아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이니셔티브 발취를 위한 양국 산업계의 협력에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삼국간 디지털 네트워크 공조체제 확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삼국간 공조의 시너지효과를 아시아 전체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단 3국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축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특히 3국간에 중국이 디지털 격차가 심한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선진기업이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해결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 인프라는 인터넷 산업에서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지향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은 법률의 정비와 함께 전자문서 등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를 표준화하고 전자무역의 인증과 공인 인증마크 발급, 전자무역 중개기관 등에 관한 조항과 전자자금이체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며 전자무역의 비대면성을 보완할 신용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의 법과 제도를 어느 한나라의 법과 제도에 맞게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의 조화는 3국의 전자상거래를 가장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점에서, 3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실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민간의 목소리와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법과 제도의 정비는 3국의 정부가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下意上達식의 자세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법과 제도는 단시간 내에 정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범사업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와 갈등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3국간의 전자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 및 정보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인프라부문에 어느 정도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정보통신기기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양국 모두 정보인프라 수준은 상대적 한계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통신 및 정보인프라 부문 모두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현격하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과 정보인프라 수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협력방안의 창출이 3국간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이 통신 및 정보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선진기술을 가진 역내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¹⁹⁾ 따라서 한·일 양국은 중국의 정보화사업(대 기업교육 포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중국시장의 선점

19) 김진삼·장동식,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시대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26권, 제4호, 2001. 9. p.19.

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면서 한·중·일 3국간의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표준화의 모색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로 순조롭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동북아 지역단위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 공동의 기술 표준화가 가능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출 수 있다.

다섯째, 아시아 지역내 물류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다수의 국가가 존재하는 아시아 역내에서 국가간 물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범아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한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별로 분산되고 단절되어 있는 물류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마련도 전자무역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다.²⁰⁾ 한·중·일 3국은 역내교역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마인드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성장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Forrester Research가 개발한 e-마켓 수출지수(eMEI=세계 e-MP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세계 총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면, 한국, 중국, 일본은 「e-비즈니스 소극적 수용국」(eMEI < 1)으로 분류되고 있다.²¹⁾ 따라서 전자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중·일 3국 정보인력의 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3국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전자무역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정보화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²⁾ 또한 3국의 정보화협력에 바탕을 둔 컨설팅기관을 설립하여 기존의 무역업체나 신설기업에게 3국의 전자무역 활성화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3국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는 단기적·장기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표준화 작업 및 통신 및 정보인프라 구축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3국간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완성하는 것과 아시아지역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3) 전자무역 활성화의 파급효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상호간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무역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서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또한 상품의 유통단계를 줄여줌으로서 물류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비하여 정보수집능력이 약하고 마케팅능력이 빈약한

2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무역협회의 조사결과 전자무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제공(전체 응답의 36.2%)이 전자무역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사이버무역에 관한 무역업체 실태조사」, 2000.6).

21) 홍석우, "글로벌시대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글로벌시대의 전자무역활성화 방안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중앙대학교 부설 국제무역물류연구소, 2001. 8. 30. p. 5.

22) 김진삼·장동식, 전계논문, p.20.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되어 역내무역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마켓의 등장에 따른 전자무역의 급증과 이로 인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한·중·일 3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정치적·감정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터넷 마켓 또는 사이버마켓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역사적인 감정보다는 아이디어와 스피드 문화 및 가격, 브랜드 및 회사이미지 등의 요인에 의하여 구매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면 3국간 역사·정치·감정적인 문제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줌으로써, 동태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3국의 경제에 모두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²³⁾

셋째,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IT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국간에 전자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 통신 및 정보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각국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통하여 3국이 협력하여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은 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설립하는데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 통신 및 정보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면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설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상거래는 무역거래비용과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줄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경쟁력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까지도 사이버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각기 디지털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도적인 인프라의 정비와 국가적인 전자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발전과 역내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내에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이동비용이 적기 때문에 전자무역을 활성화하는 경우 3국간 교역이 현재보다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삼국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국간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전자상거래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일 것이며, 또한 전자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도 한·중·일 삼국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23) 김진삼·장동식, 상계서, p.5.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로는 첫째, 한·중·일 3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상호간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전자상거래는 한·중·일 3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정치적·감정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며 셋째,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IT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은 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설립하는데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설립된다면 EU, NAFTA와 버금가는 지역협력체가 탄생할 수 있게 되어 세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고 역동적인 동북아가 명실상부한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홍, "한일간의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2001. 3.
- 김동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 포스코경영연구소, 2001.6.
- 김종근, "일·중 및 ASEAN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4. pp. 32-37.
- 김진삼·장동식,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26권, 제4호, 2001. 9. pp.3-24.
- 남상열, 「동북아시아 3국간 무역의 보완관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연구』 2000년 봄호.
- 민윤경, "중국 인터넷전자상거래 시장환경과 외국기업의 진입현황", 『POSRI경영연구』, 제1권제2호, 2001, pp.131-167.
- 박기홍외, 「디지털경제와 인터넷 혁명」, 산업연구원, 2000. 4. p.
- 박노형,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 동향과 내용 분석」,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0. 12.
- 박철규·정태식·김후진, 「IMF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한국경제-지난 4년의 성과와 과제-」, 재정경제부, 2001. 11.
- 산업자원부 외,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2000. 2.
- 산업자원부,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 및 사이버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0. 4.
- 삼성경제연구소, "한·중 수교 10년의 회고와 과제", 『CEO Information』, 제362호, 2002. 8. 21.
- 신용대외,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향-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산업연구원, 2000. 3. p. 21.
- 안석교, 허홍호,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인식과 동북아 경제통합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1-12. 2001. 12. 20.
- 안지홍,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1호, 2001. 6.

- 윤진나,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논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세계경제』, 2001.11, pp.45-54.
- 윤창인·문원기·이윤, "동아시아 전자무역 공동체 형성방향", 국제e-비즈니스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논문집, 2001. 10. pp. 51~68.
- 이창재外,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총괄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원신희, "중국의 주요 분야별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2. pp. 74~82.
- _____, 「중국 국제무역 부문의 전자상거래 발전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 조현준, 「중국경제의 향후 10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2002. 8. p. 29.
- 최환석, 「한·중·일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 한국무역협회, 「사이버무역 국제동향과 성공전략」, 『굿인포메이션』, 2001. 1.
- _____, 「사이버무역에 관한 무역업계 실태조사」, 2000. 6.
- _____, 「사이버무역」,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2000. 10.
- 한국은행,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구조 비교분석과 향후 과제」, 2001. 6.
- 한국전산원, 「2002 국가정보화백서」, 2002. 6. 23, p. 494.
- 홍석우, 「글로벌시대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글로벌시대의 전자무역활성화 방안 세미나, 한국무역협회·중앙대학교 부설 국제무역물류연구소, 2001. 8. 30. p. 5.
- 「중국 정보통신시장의 발전과 대중국 진출 전략」, 2000. 3.
- Andersen Consulting and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2000.
- Charles Carol Ann, Building the Global Information Economy,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1998
- Dougan, Diana Lady and Fan, Xing, Scaling the Great Wall of E-Commerce: Strategic Issues and Recommended Actions. Cyber Century Forum, Washington D.C., 1999
-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MII, 2000). China E-commerce 2000, 24 issues.
- The World Bank, China 2020.